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조 초읽기… 민주, 요구서 제출

조사 대상에 ‘尹 대통령 노선변경 인지·처가 개입 여부’ 등 명시 정의·기본소득당 “진상 규명” 한목소리…국힘 “사안 아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크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욱,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경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제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인수위 시기 윤역사와 국토부 간에 변경안이 지속으로 마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노선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등이 없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협력성 발언에 국토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불가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종점 변경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와 대통령 처가 인적 및 처가 법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군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현장 점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대한 노선을 다 검토하고 필요성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똥만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을 향해 “정쟁의 기회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조 요구서와 관련된 여야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할 사안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 글을 통해 “민주당에게 묻는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봤느냐, 양평주민 의견 들어봤느냐, 현장에는 가봤느냐”며 “의혹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의견에 근거한 최선방안 추진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민주 의원 전원 공동발의키로…이재명, 35조 민생 추경안 거둬서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키로 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항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함에 따라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통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대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내 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둬서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30조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與 ‘北 비핵화·도발 중단 촉구안’ 당론 채택

정전협정 70주년 안보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의 ‘군사기밀 열람’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전임 정권과 민주당을 향한 비난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들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선 거유 가짜 평화쇼”, “북한 퍼주기·굴종” 등으로 비

판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며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한다.

결의안에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여수상의 前회장 압수수색

송영길 전 민주 대표 외곽조직 수억 불법기부 정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후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기업·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지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 박 전 회장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수상이가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공익법인인 먹사연에 수억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 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정면 평산리 바닷가 절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리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대출·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